

시론

‘신문의 날’을 즈음해 신문을 생각한다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매년 4월7일은 '신문의 날'이다. 이날은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판이자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일이다. 언론인들은 1957년 4월7일 '독립신문'의 회갑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를 다짐하고자 '신문의 날'을 제정했다. 그러나 올해로 88회 생일을 맞은 셈이다.
요컨대, '신문의 날'은 독립협회의 서재필과 윤치호 등이 한 말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잡고 민족을 개화해 자주·독립·민권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발행한 '독립신문'의 창간 정신을 기리고, 그 구국 이념을 본받아 민주·자유언론의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점이 된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후 속속 창간한 신문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정론지라는 명예로운 호칭과 이미지를 얻게 됐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

는 파수꾼 역할을 하며 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렇던 신문이, 근래에 들어서는 회사의 수입 수단 혹은 객관적 사실보다 가십거리나 자신들의 주장과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익 추구 집단으로 비쳐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색안경을 끼고 과거와는 다르게 신문을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언론은 공적 업무의 영역에 있기에 공기관과 같은 역할 수행을 한다는 사실이다. 언론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인 동시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언론인은 그 어떤 직업이나 직종의 종사자보다 올바른 의식이 요구되는 이이다.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책임감 혹은 의식 없이 일반 기업체처럼 영리만을 추구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 독자와 국민에게 외면받기 때문이다.
언론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게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과 권력·돈 등을 가진 소위 힘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올해 제88회 신문의 날을 앞두고, 제1회 표

어로 쓰였던 '신문은 약자의 반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곱씹어본다. 신문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항상 그들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문 현실은 어떠한가. 약자의 반역가 아닌, 권력자에 빌붙어 되레 강자를 대변하고 있거나 않은지 곰곰이 되새겨 볼 일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뉴스를 전하는 각종 대중 미디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문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가히 '징벌적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굳이 언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신문의 진정한 위기는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독자가 없는, 독자가 찾지 않는 신문은 언론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
올해 신문의 날 표어는 '신문 읽는 오늘, 더 지혜로운 내일'이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표어의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평등 추구'라는 진리의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신문은 약자의 반역'라는 제1회 신문의 날 표어가 가슴 아프게 박히는 아침이다.

자치칼럼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확대 강화해야



김 병 도
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가깝다. 그럼에도 모든 지자체는 주민자치를 지향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 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행정에 민주성을 내걸고 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땅히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로 나아가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단체자치 요소를 점진적으로 줄여감과 동시에 주민자치 요소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지방자치는 두 가지 유

형이 있다. 하나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주민자치와 있고, 다른 하나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된 단체자치와 있다.
주민자치는 영국에서 통일국가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각 지방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자치 전통이 수립됐다. 통일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제도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주민자치는 자주적 자치행정을 의미한다. 지역의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체로 지역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에게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 민주정치 방식을 택한다. 그러나 중요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의 방식도 취한다.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된 방식을 의미한다.
단체자치는 집권국가로 전통이 강한 독일과 프랑스에서 주민들의 생활문제와 관련된 해결을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치를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로 인식한다. 단체자치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해당 지방의 사무를 가능한 한

국가와 관여 없이 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체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국가가 국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에서 독립된 공적인 법인으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형태의 자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성이 혼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등 지방행정의 제반 과정에 각종의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특성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정책은 단체자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실시한 지 벌써 33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보다 단체자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더불어 지방자치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비하면 조속지향이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길 바란다.

독자투고

QR코드 이용한 신종범죄 '큐싱' 주의해야



최근 이용자가 의심 없이 QR코드를 스캔하는 특성을 악용한 신종 범죄 '큐싱(Q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SNS와 공유 자전거·각종 QR코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QR코드가 쓰이는 실생활 곳곳에서 큐싱 피해가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사기 예방 앱 설치를 위해 QR코드를 촬영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악성 앱을 설

치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큐싱 예방법으로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을 금지한다. 둘째,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를 스캔할 때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한다. 특히 출입 등록 또는 공유 자전거 등을 이용할 땐 가짜 QR코드가 붙어 있을 수 있다. 셋째 QR코드 스캔 시 연결되는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QR코드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는다. 악성 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악성 프로그램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을 설치해 앱을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소액결제, 각종 카드 등을 정지하며 피해를 예방한다.
큐싱을 예방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고, 접속 전 링크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언기오·창흥경찰서 경무계장>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 안전을 위해 꼭 비워주세요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 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해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올해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를 신설해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 수조사를 통해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승주·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 위 무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총선 이슈화 바람직하지 않아

국립 의대 신설을 둘러싼 전남 동·서부 지역 간 경쟁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전남도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선을 넘어 대결 구도는 격화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는 지난주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서남권 전체의 공동된 관심 사항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서후보는 전국 유인도서 42%가 밀집돼 있고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이라며 서부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목포 선거구 김원이 후보도 전남도가 추진하는 공동 의대에 역행하는 일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 바 동부권을 겨냥했다.
반면 같은 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후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후보는 순천대 의대 유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대 단일 의대를 주장한다. 여기에 여수갑 주철현 후보와 여수를 조계원 후보는 공동공약 발표를 통해 전남대병원 여수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국립 의대를 약속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식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을 정해 알려주면, 지역 의견 수렴을 전제로 뒤 전남도에 공을 돌렸다. 이에 전남도는 통합 설립이 여의치 않다면 단독이라도 가능하다고 압박에 나서고 있으나 갈등은 되레 확산하고 있다.
어렵게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에 이어 총리가 의지를 드러낸 것은 환영할 만 일이다. 해서 전남도의 중재가 절실한 것이다. 도민 전체의 뜻도 다르지 않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전남권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내내 아쉬워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걸음도 더 나아가갈 수 없다.
총선 과정에서도 분열을 조장해선 안 된다.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의료 취약지인 전남도의 30년 숙원이다. 동·서부권이 의기투합해야 한다. 전남도는 윤 대통령 임기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올해 내 신설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통합 의대가 최우선 순위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선분양 광주 중앙공원1지구 분양가 시민 눈높이 맞나

선분양 전환이 추진되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비공영시설(아파트) 분양가가 내렸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33㎡(평)당 2천305만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타당성 검증에서 후보양(3천405만~3천822만원) 대비 낮아진 2천425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재차 조정됐다.
광주시는 공공기여금 1천3천71억원 중 평당 분양가를 낮추는데 313억원을 반영했다. 도시계획위는 아파트의 선분양 변경 의결과 함께 비용 절감을 통해 분양가 추가 인하에 노력해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최근 냉각된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위 조건부 통과에 따라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아파트 분양 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2천72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광주시가 당사자다. 광주시는 잇단 잡음을 의식해 선분양 타당성 검증 결과 요약본, 총사업비 산출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토론회, 전문가 검증, 도시계획위 회의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신속·투명·공개 원칙을 가지고 모든 의혹을 날같이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중앙공원 1 지구는 풍광이 뛰어난 풍암호수를 품어 안고, 도시철도 2호선이 인접해 최고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하며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가 성공의 바로미터다. 공공기여를 축소하고 추가적인 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수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아침물어는 詩 4월을 품다

유선철



어디로 떠났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던 그녀가 돌아왔다, 4월의 초입에서 두 불이 말랑말랑한 옛된 모습 그대로다
단숨에 들쳐업고 그늘로 들어가서 머릿칼 빗어주며 휘파람 불어본다
까르르 자지리지며 산은 허리 찢히고 안부도 못 전하고 있고 산 날 많았는데 바람의 길목에다 등을 환히 밝혔구나
꽃보다 술결이 더운 너를 와락, 껴안는다
(시집 '슬픔은 별보다 많지', 작가, 2024)

[시의 눈]

나하마터면 4월을 잊을 뻔했습니다. 아니, 온산을 찾았지만 시베건 산물로 잿더미만 남겼더군요. 비닷가에서도 '4월아!'를 연거부 불렀지요. 하지만 유조차 기름덩이에 그녀는 숨도 쉬지 못했어. 후엿 어머니의 빈집인가도 했지요. 한데, 눈썹 길쭉이만 흘려가릴 뿐이었어. 우리 발이 있던가새굴에 이르렀습니다. 역새들이 마구 흠바람에 휘날릴 때 뒤에 잠깐 흘렀지요. '바람의 길목'일까. 어릴 때 아버지 가슴은 백록이 '등을 휘히 밝'힌 채 서 있지 않겠어. 그 하얀 꽃뿔이 더운 손의 손길에 끼쳐 왔습니다. 난 순간 팔을 뻗었어. 아, 머리칼 행내가 인겨져 왔어. 그 녀가 '까르르' 허리를 찢습니다. 순간, 나는 그 허리를 툭 분지릅니다. 저런! 그런 건 말랑 행이 생각나는 4월이군요. 유선철 시인은 경북 김천에서 나 2012년 경남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해 시조집 '필레로 만다라'(2020)를 펴냈습니다. 제5회 천강문학상 대상, 제4회 정음시조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시적 대상에 활발한 상상력과 깊은 서정의 웃음입 하며 시천주(侍天主)를 만나게 하는 시인이지요.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1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